민주 "화물연대 파업,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중재해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중재 언급
"국토위 열어 법안 심사 착수할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상황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양경숙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며 "ILO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걸 의견 조회라고 둘러대면서 경제 위기 피해자인 노동자를 돕고 협의하긴커녕 협박에 처벌, 위협만 강조한다"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했다.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법치주의는 법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력통제를 위한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최이슬 기자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성과 공유
"가장 이재명다운 길 걷겠다"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취임 100일 성과를 공유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가장 민주당다운 길,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고 변화와 희망을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가는 과정이었다.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충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이던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 대화, 타협 실종'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재명호' 민주당의 행보에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는 별도로 갖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은 것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환 기자

野, 장경태 고발에 "김건희 비판 원천 봉쇄하려 하나"

"자료, 근거 공개하고 해명하면 될 일"
"불편 의혹, 비판 못하게 재갈 물리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한 데 대해 "비판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가"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을 내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언급하고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니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다.

또 "한사코 고발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야당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김 여사가 비공개 개별 일정을 진행했다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빈곤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다", "사진을 두고 비판과 의혹이 일었다"고 했다.

또 "비판과 의혹을 대신 제기한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고발까지 한단 말인가"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하게 반박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을 대리해 질문한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단 태도가 좀스럽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건가"라며 "자유는 어디 있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졌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가 세상에 존재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 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자료를 공개하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관련 모든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엔 제출할 수 있는데 왜 국민에겐 공개하지 못하나"라며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 취하로 결재해지 하라. 이게 정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에게 고언한다"며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 물리는 속 좁은 정치가 부끄럽지 않나. 비판을 억압하고 반대편에 고통을 주는 건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